



2022
VOL.02

지식공유 브리프

- | 발 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 발 행 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 편 집 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 |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 | 편집간사 유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 | 문 의 044-550-4451, 044-550-4280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KSP·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YKSP 스토리/CID 소식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태희 전문위원, 몽골 재무부 장관 표창 수상



행사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탄소중립과 그린 ODA

2022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2022 글로벌 포럼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
전농림부차관 이준원
jwlee433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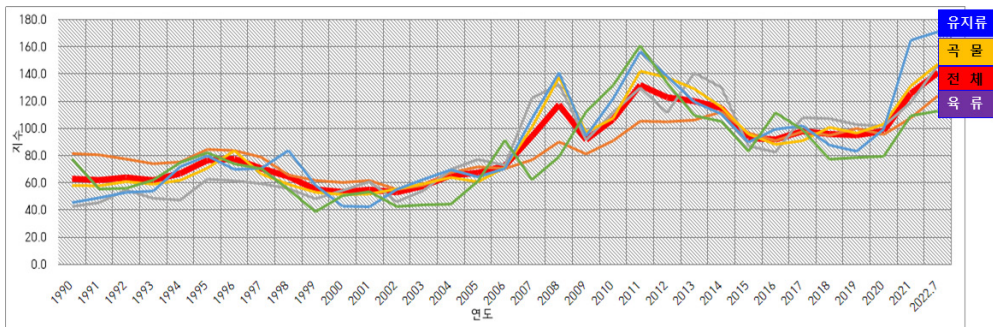
● 세계식량 위기와 그 영향

2022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AO 전체 식량가격지수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2022년 7월, 기준연도(2014~2016)에 비해 40.9% 상승하였다. 특히, 곡물류 지수는 47.3%, 유지류 지수는 71.1%

폭등하였다. 육류가격지수도 24% 상승하였다. 지난 10년간 안정세를 보여 온 국제식량가격지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식량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공산품처럼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국의 곡물 수출금지에 따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반 국민들까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FAO 식량가격지수 (FAO, 2014~2016=100.0)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7
전체식량가격지수	63.0	76.6	53.3	67.4	106.7	93.0	98.1	125.7	140.9
유지류	45.5	80.0	42.9	64.4	122.0	89.9	99.4	164.9	171.1
곡물	58.1	70.8	51.4	60.8	107.5	95.9	103.1	131.2	147.3
육류	81.5	84.6	60.3	71.8	91.0	96.7	95.5	107.7	124.0
유제품	42.6	62.7	54.5	77.2	111.9	87.1	101.8	119.1	146.4
설탕	77.7	82.2	50.6	61.2	131.7	83.2	79.5	109.3	112.8





우리는 식량난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을 목격해 왔다. 1991년 말,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통제하던 소련 공산주의 제국을 하루아침에 붕괴시켜 버렸다. 10년 전 소위 아랍의 봄도 식량 가격 폭등이 기폭제가 되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고, 튀니지, 이집트 등의 정권교체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한국도 6·25 전쟁 중 80kg 가마당 쌀가격이 9.5원에서 484원으로 51배 폭등하였다. 현재 쌀값 기준으로 80kg 가마당 20만원이 1,0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곡물자급도(가축 사료용 곡물 포함)는 2021년 2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곡물 수요량 2,100만 톤 중 400만 톤을 제외한 1,700만 톤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곡인 쌀만 자급할 뿐 밀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콩도 일부 식용콩만 생산하고 가공용이나 사료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자급률은 7.5%에 불과하다. 심지어 쇠고기의 자급률도 37%로 2021년 쇠고기 수입량은 50만 톤, 38억 달러로 전년보다 22% 증가하였다. 2021년 한국의 무역수지가 295억 달러 흑자인 반면 농축수산물의 적자만 368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추월한 것이다. 금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식량가격은 더 폭등하여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2022년 6월까지 농축수산물의 수입액은 276억 달러로 전년보다 20% 증가하여 올해는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밀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67.4%, 팥유는 46.3%, 옥수수는 30.8%, 콩은 25.5%, 쇠고기는 26.8% 늘었다. 심지어 상반기 커피 원료 수입액도 5.7억 달러로 31.4% 증가하여 금년 커피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식량가격 폭등은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물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금년 7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6.3%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식량가격 상승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식량가격지수가 크게 오른 식용유의 국내 소비자물가는 55.6% 상승하였고, 밀가루는 36.4%, 수입 쇠고기는 24.7% 급등하였다. 반면 자급률이 높은 주식인 쌀은 소비자가격이 오히려 14.3% 하락하였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안정이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쌀의 식량안보 중요성을 모두 실감한 한 해이기도 하다.

● 한국의 해외농업개발과 교훈

한국은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아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 개발이 절실하다. 우리의 해외농업개발은 1960~70년대 정부주도의 해외 농업이민이 시초이다.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식량안보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영농 부적합지 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1978년 매입한 2만 ha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아타마우까의 농장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농업이민을 담당했던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개편되었다.

1990년대에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연해주, 중국 등의 해외농업 개발을 추진했으나 대규모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대부분 철수하였다. 2008년 세계적인 식량 위기 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생산만 포함하는 자급률 대신 해외조달을 포함하는 자주율개념을 도입하였다. 해외농업 개발과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특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¹⁾ 확보를 통해 곡물 640만 톤을 반입하여 곡물 자주율(국내 생산 + 해외곡물 생산 + 곡물 엘리베이터)을 6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하였고,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3년 330억원에 달했던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용자금은 2021년 69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aT(농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한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계획은 성사 직전 무산되었고, 62개 해외 진출 기업이 반입한 곡물은 2021년 63만 톤에 불과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우리보다 50년이나 앞선 60년대 중반 미국에 진출하였고, 1979년에는 곡물수입에 필수적인 수출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3,000만 톤의 곡물수입 중 70%인 2,000만 톤을 곡물메이저²⁾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식량위기 때만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갖다가 지난 10년간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추진동력을 잃은 것이다.

2021년부터 국제식량 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해외곡물의 안정적 확보나 농업부문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농업부문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과제

우리는 과거 식량위기 때마다 국내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국내생산 확대는 농지면적의 감소와 곡물의 소득이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농지면적은 지난 30년간 211만 ha에서 156만 ha로 26% 줄었고, 농가 인구는 동기간 666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체인구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대 정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천명하였음에도 곡물자급률이 2000년 29.7%에서 2021년 20% 이하로 매년 하락한 이유이다. 따라서 국내생산 노력과 함께 해외농업개발 및 무역원활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는 것도 식량안보 과제이다.

그러나 수입을 통한 곡물의 안정적 확보도 국제무역 질서를 위해 창설된 WTO가 무력화되어 한계가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WTO를 국제 무역규범의 제정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정치투쟁의 대결장으로 변질시켰다. 또한 WTO 규정상 원칙적으로 수출금지를 허용치 않으나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금년 초 밀, 팜유 등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소가 힘들고, 판결에 시간이 걸려 당장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WTO 각료회의에서도 농산물의 불필요한 수출금지를 자제하자는 선언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들은 WTO와 같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다자무역체제보다 동일한 원칙과 철학을 가진 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경제협약체를 통한 무역원활화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WTO의 다자무역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우리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1962년 필리핀의 1인당 GNI는 220달러로 한국의

1 곡물 엘리베이터는 곡물을 비축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 시설이다.

2 곡물메이저란 곡물의 저장·수송·수출입 등을 취급하는 세계적인 거대 곡물회사를 일컫는다.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톡

120달러보다 두 배 높았으나 2021년 한국은 35,000달러, 필리핀은 4,000달러로 이제 한국이 9배 높다. 전 세계 기아인구는 필자가 로마 FAO 본부에 근무할 때인 2000년 약 8억 명이었는데 20년 후인 지금도 8.3억 명³⁾이다. 그동안 국제기구의 노력과 각국의 식량원조 및 국제개발 협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아인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도 한국이 세계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위상에 걸맞은 국제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국제개발협력은 사업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간투자로 발전토록 하는 것이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조정을 위해 차관 주재의 글로벌 농림협력 협의회와 해외농업개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속 기관의 사업(약 1,500억원)만 대상이고, KOICA,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이나 TRQ 도입 등과의 연계도 미흡하다. 예를 들어 UN 식량계획(WFP)을 통해 에티오피아에 2018년부터 매년 많은 쌀을 원조하고, 여러 ODA 사업을 집중(현재 4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인 KOPIA(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도 일찍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주요 생산작목인 참깨조차 TRQ 국내 반입량이 전무하고, 국내기업의 에티오피아 해외농업투자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 ODA 사업과 TRQ 도입, 해외농업개발 및 식량원조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사례이다.

앞으로 농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과 해외농업개발, TRQ 도입,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원조, 여러 기관의 해외파견 및 국내초청 연수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농업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전세계 기아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국내 식량위기도 해결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윈윈(win-win)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¹⁾

*본 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몽골사무소장 윤석현
SYoon@imf.org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초기의 예상과 달리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 곳의 위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세계화가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코로나 19로 인해 붕괴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개발국에 집중되었다. 높은 감염 위험과 사망률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도 이들 국가들에서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료 및 사회 안전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 여력이 부족한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들에게는 언감생심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기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될 무렵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전세계 공급망을 흔들며 야기시킨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화되었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장과 팬데믹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의 부활 및 보복 소비까지 더하여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저성장-고물가의 우려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과 선진국으로의 자본 회귀는 부채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 상황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만들어낸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은 근로 의욕 저하를 야기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서도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의 속도 차이로 인해 전 세계 국가 간 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 19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한층 격화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두 국가의 체제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IT 기술을 중심으로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근무 환경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IC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업무공간에도 적용되면서 원격 및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대면

1 본 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위주의 업무환경으로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바꾸어 놓은 새로운 국내외적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지식공유사업 (KSP)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첫째,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은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악화된 부채상태, 확대된 빈곤층, 심화된 빈부격차, 저성장-고물가 위험 증대 등 복잡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개발국에서 신흥개도국을 거쳐 선진국에 이른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은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강대국들 간의 갈등으로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저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KSP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일부 신흥개도국과 대다수 저개발국들에게는 전염병 예방, 방역,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통제사례가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방역모델 지식 및 경험 전수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대면 진료, 화상회의, 원격 수업, 메타버스 등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만든 새로운 풍조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앞선 ICT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KSP 수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신흥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부패근절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로부터 이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끝으로, KSP 사업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KSP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수혜국의 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수혜국에 맞춤형 정책 제언을 지향하는 지식기반 협력사업인 KSP의 특성상 사업선정 시 수혜국의 요청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혜국들이 자국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결과만을 보고 요청한 과제를 선뜻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할 경우 노력과 비용 대비 유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몽골의 경우 정주하지 않는 유목민족의 특성상 미래에 대비한 저축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국민저축률이 낮고, 법과 계약(rule of law)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행에 대한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편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나, 국내자본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계약이행 준수 수준이 낮아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외 차입에만 의존해온 결과 국민소득대비 외채비율이 높아, 여러 번 경제위기를 겪었다. 몽골정부는 오래전부터 몽골에도 발전된 한국의 자본시장을 만들어보고 싶어하나, 국내자본이 부족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자본시장 설립은 몽골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다.

둘째, 보고서를 통한 정책 제언과 함께 실무 경험도 전수 (Hands-on assistance)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성공사례와 함께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실패 경험도 수혜국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KSP 사업이 단년도 주기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혜국의 습득능력을 감안하여 보다 사업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DGs혁신연구단장 김지현
jihyunkim@stepi.re.kr

● COVID-19와 디지털 전환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은 지구촌 각지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는 조금 완화되었지만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개인 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융합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의 혁신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나 활용을 통해 특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융합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의 혁신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기회와 혜택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 격차는 COVID-19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투자, 연구개발의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ODA 규모 축소, 글로벌 신규투자의 축소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지원 수요에 대비한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COVID-19와 이로 인한 사회변화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가 간 기술 및 인프라 역량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이른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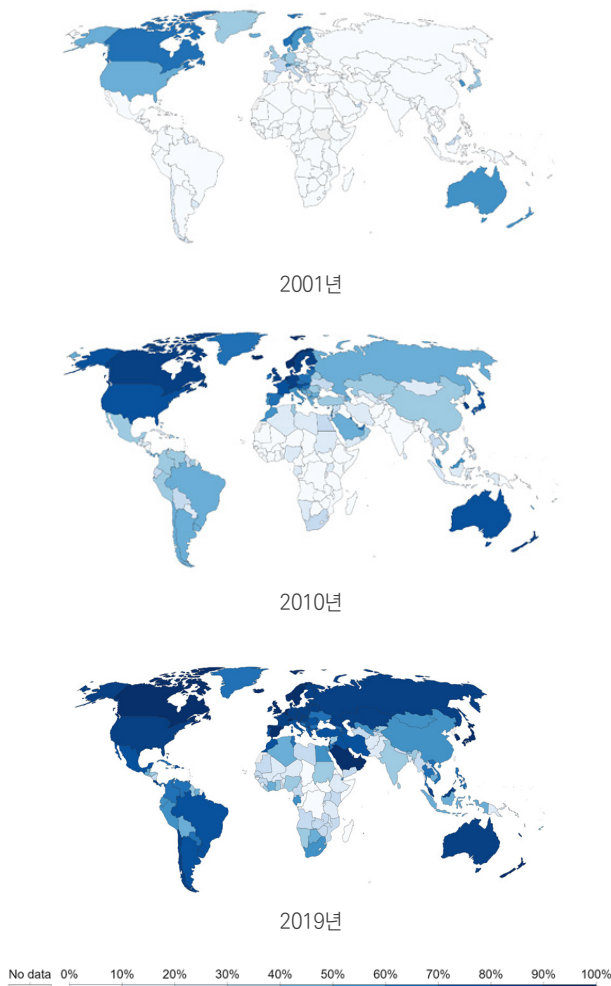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과 도전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디지털 격차의 해소이다. 일례로 디지털 사회 구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률만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보아도 현재의 격차가 이미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87% 이상의 선진국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반해, 최저개발국(LDC)의 인터넷 사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¹⁾,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도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그림 1 참조).

【 그림 1 】 인터넷 사용인구의 변화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share-of-individuals-using-the-internet>

기술이나 인프라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격차와 함께 정보 활동에서의 질적 격차로 쟁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다. 이는 결국 개인의 데이터는 보호하고 비개인(non-personal) 데이터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과 가짜뉴스, 사이버 폭력, 디지털 인권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들과 연결된다²⁾.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은 ICT 부문의 고용 비중이 낮고 개인의 인프라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상태여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시스템 설계 등 많은 영역에서 부족한 대응역량을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 자동화는 저숙련 노동자를 대체하여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³⁾. 또한 최근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과 자동화·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의 가속화는 개발도상국의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ICT 기술과 제품, 특히 데이터 센터의 도입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해 CO₂ 발생량 증가 등의 글로벌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⁴⁾. 디지털, 특히 IC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20%까지 차지하고 이 중 서버 등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수요가 1/3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⁵⁾이나 자동차 공유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CO₂ 발생량이 높은) 자동차 운행 대수의 폭증 현상

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s and Figures 2019, Geneva, 2019.
 2 Lazovic, V. and T. Durickovic, "The digital economy in developing countries—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ference paper, the 37th MIPRO, 2014.
 3 Banga, K. and Te Velde, D. W., "Digitalization and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 Africa,"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2018; Frey, C. B., et al., Technology at Work v2.0-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Citi Group, 2016; Zervoudi, 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roposed Policies," Industrial Robotics—New Paradigm, 2020.
 4 Hicks, J., "Environmental Challen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K4D Helpdesk Report, UK FCDO, 2021.
 5 Nicola Jones, "How to stop data centers from gobbling up the world's electricity", Nature, vol. 561, No. 7722, September, 2018.

등의 예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단순히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여 현재보다 나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좁히면서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거나 심화될 수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디지털 ODA의 방향: 역량강화와 기술 활용

2021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1-2025)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뉴딜 ODA를 혁신적 ODA를 추구하는 주요 추진 사업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를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전개과정과 도전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수립으로 볼 수는 없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에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 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 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범분야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지원 하는 디지털 전환지원은 단순히 ICT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야별 ODA 사업의 묶음일 수 없다. 분야 간 융합과 부처 간 연계, 더 나아가 다자협력 체계를 활용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T 기반 인프라가 중심이 되는 사업 전략에서 벗어나, 협력국이 스스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적 역량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들 역시 제도 측면의 경험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과 기업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과 교육 등 전통적인 분야별 사업방식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m-health, e-learning 등에 집중하는 이른바 주류화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이 결국 기업으로부터 오는 만큼 효과적인 민관협력의 방식, 그리고 기업의 동 분야 개발협력 참여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디지털 사회혁신 ODA 민관협력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디지털 기술기반 발전의 모델로서 한국이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
전문연구원 황금물결
gyul.hwang@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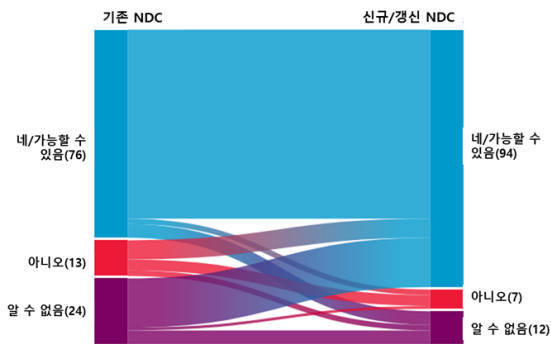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유럽의 폭염, 동남아시아의 돌발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작년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에서 당사국들은 7년여간 지지부진했던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 규칙(Rule Book, 제6조)을 타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UNFCCC는 탄소 감축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의 단위당(unit, 보통 톤당) 시장가격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메커니즘(Market-mechanism)이다. 또 다른 방안은 대가성 거래(quid pro quo) 없이 비부속서 국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을 지원함으로써 파리협약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비시장 접근법(NMAs, Non-Market Approaches)으로 보통 감축사업 유치국(host country)의 역량 강화, 기술 이전, 자원 조달, 탄소세(국경세)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다.¹⁾

이 두 가지 방안 중 시장 메커니즘이 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부속서 1 국가가 개발도상국 투자 후 발생한 감축분을 자국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협력적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당사국 모두가 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후 국제 이전 감축 실적(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획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운영 경험, CD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등 프로젝트성 거래 시장의 구축 사례를 토대로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높은 시장 신뢰도를 갖는 국제탄소시장의 출범을 기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당사국들이 시장을 통한 비용 효과적 NDC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하길 희망할 것이다.

1) FCCC/PA/CMA/2021/10/Add.1 Decision 4/CMA.3 (2022년 3월 8일)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 당사국의 국제 탄소 시장 참여 의사 변화 】



* 출처: Taryn Fransen, Making Sense of Countries' Paris Agreement Climate Pledges (2021.10.22), WRI (World Resource Institute) 선임연구위원인 저자가 Climate Watch(2021)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반해 NMAs는 정의와 분류가 다소 포괄적이고, 지원 프로그램이 아직 구상 단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거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한 시장 메커니즘이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²⁾ 따라서 우리나라도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국외 감축 목표를 상향³⁾하고,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2022.08.19)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과 같이 ITMO 확보를 위해 국제 감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장 메커니즘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축 실적 산정 및 승인 관련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TMO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사업 당사국들의 감축 실적 규모 및 품질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ITMO 승인은 감축사업 유치국의 결정에 의해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 방법론의 정립, 유치국 탄소 인벤토리

및 국가감축등록부 구축 등 감축 실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⁴⁾ 무엇보다 승인 당사자인 유치국의 측정·보고·감축(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국제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국가 재정 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ODA 예산은 파리 원조 효과성 원칙에 따라 감축 사업에 투입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리스크 심화로 영위 사업 외 투자 철회, 탄소세 등 ETS 외 탄소가격시스템 도입 논의로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인센티브가 낮아지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중·소규모로 진행된 CDM 사업당 감축량을 고려할 경우 2030년 국외 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국제 감축 사업의 규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개의 감축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 감축 실적을 유치국 포함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자국 NDC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이중 계산(Double coun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 계산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 문제를 넘어 시장 메커니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베트남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2021. 11)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와 대외경제정책 중점 협력국이자 전 세계 3위 배출량을 기록한 탄소 다배출 국가인 인도를 포함한 17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탄소 수출(carbon export) 금지를 발표하면서 ITMO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⁵⁾ 또한, 2030년 이후 현재 시장 메커니즘의

2 2022년 11월 글래스고 위원회(Glasgow Committee) 논의 및 2026년 반기별 이행 점검 실시 예정

3 기존 16.2백만 톤CO₂eq (총 감축 목표량의 8%)에서 33.5백만 톤CO₂eq, (12%)로 상향 조정(기준연도 2018 대비 2030년 감축 목표)

4 우리 정부는 국제 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규범 준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

5 S&P Global, "India close to setting up local carbon market, ban carbon credits exports",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latest-news/energy-transition/080922-india-close-to-setting-up-local-carbon-market-ban-carbon-credits-exports> (2022년 8월 9일)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고 2028년까지 제6조 이행규칙이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2030년 시장메커니즘 종료 전 비부속서 국가들이 NDC 달성을 위해 ITMO 이전을 주저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은 흐름상 큰 무리없이 출범하여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 노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시장 메커니즘이 가진 리스크를 상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한 NMAs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CDM의 경우 유치국은 탄소감축량이 과대 계상되었어도 손해볼 것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과대 감축량 계상과 배출권 수출은 유치국의 NDC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의 MRV 역량을 강화한다면 완결성 있는 인벤토리가 구축됨으로써 감축 실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기후 전략 및 국가 개발 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자원 조달 방안을 도입하여 국제 감축 사업을 규모화할 수 있다. 이때 감축 사업의 효과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ODA 예산으로 전액 감축사업을 실시하기 보다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 헷지(risk hedge) 차원에서 ODA 예산을 일부 블렌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ODA 비율을 제하고 ITMO를 이전받는 방식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기반 기후 금융(Result-Based Carbon Finance)을 통해 유치국과 사전에 합의된 결과가 달성되었을 때만 ITMO 판매 금액으로 감축 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선진국에게 갚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때 부속서 국가는 다시 기후금융 재원을 보충하여 선순환적 자원 조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치국으로 하여금 ITMO만이 아닌 자체적인 탄소 감축

대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치국의 기후기술 성숙도와 기술개발의 한계 비용을 고려한 기술지원과 정책자문을 실시한다. 이때 우선 당사국들의 탄소배출량, 중점 감축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 상쇄(international offset)를 통해 탄소 감축 의사가 있는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conditional)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등 포괄적인 검토를 통한 유치국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탄소감축 대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NMAs가 채택될 수 있다.

【 당사국 제안 NMAs 】

NMAs 범위	NMAs 중점 분야
NMAs 범위	금융 및 기술 협력 / 규제 / 재정 방안 집단 행동 / 모니터링 및 통제
NMAs 중점 분야	적응,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감축 방안 / 청정에너지원 개발 / 범분야 중점분야 / 사회통합 / 금융 정책 및 제도 / 순환경제, 블루카본 / 노동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 적응 혜택 메커니즘

* 출처: FCCC/SBSTA/2022/3, Views and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6 of decision 4/CMA.3,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2022년 5월 13일)

이러한 NMAs를 활용한 ODA 사업을 국제 감축 사업 사전단계로 혹은 감축사업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감축 사업의 혜택이 이전국(Transferred country) 뿐만 아니라 유치국에게도 함께 돌아간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사국간 거래 비용 감소를 통해 ITMO 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부속서 국가(선진국)는 시장 메커니즘을, 비부속서 국가(개발도상국, 최저빈민국)는 NMAs라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부터 먼저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ITMO 승인의 패를 쥐고 있는 유치국의 환경과 수요를 고려하여 ODA란 훌륭한 수단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 2팀
전문연구원 **한재현**
jhhan@kdi.re.kr

● 시너지 창출의 장(場), 산업단지

시너지(Synergy)는 여럿이 모여 단순합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단지는 경제개발에 있어 시너지 추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및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간 교류·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가운데, 각국의 경제개발 주요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과 산업단지, 즉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중추,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불가리아가 디지털 혁신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배경에는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으로 대변되는 경제·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전략이 있다. 거대한 EU시장을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여 EU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EU 회원국 간 일관성 있는 디지털 혁신 정책을 통한 산업 디지털화가 각국의 주요 경제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사회 지표(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에¹⁾ 의하면, 불가리아 디지털 혁신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 경제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의 경우,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국제화 및 기술혁신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률의 75%, 전체 부가가치의 65%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²⁾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으로 실시 중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 2014-2020, 2021-2027> 프로그램 하에 기업이 정신, 시장 접근성, 재원조달, 디지털화와 기술, 기업환경 및 규제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언급하였다. 또한

1 European Commission, "2019 SBA Fact Sheet BULGARIA",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38662/attachments/4/translations/en/renditions/pdf> (2022년 9월 26일)

2 Johannes BAHRKE and Marietta GRAMMENO,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21: overall progress in digital transition but need for new EU-wide efforts",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5481 (2022년 9월 26일)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와 기술집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더 나아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에 디지털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내에 디지털 혁신산업단지에 대한 개념과 세부 추진전략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디지털화·혁신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ICT 기술이 접목된 입지조건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 즉 스마트 산업 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특히 2021년 기준 10개의 스마트 기술과 그린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전략개발과 이행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불가리아는 자국에 맞춤형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불가리아 디지털 혁신산업 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을 주제로 KSP수요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공식 착수하였다.

● 불가리아 맞춤형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그 설계의 여정

본 KSP 사업은 1) 불가리아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모델 개발, 2) 산업단지 이해관계자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강화 방안, 3) 디지털 혁신기술을 이용한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세부주제 1은 불가리아에 맞춤형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선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및 변혁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① 디지털 혁신산업 단지의 개념, ②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 전환을 위한 실용 프로그램 및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③ 성공적인 산업단지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 1을 토대로 세부주제 2에서는 산업단지 내 참여자들 간의 R&D·교육·혁신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불가리아의 현황을 디지털 혁신 역량의 요소인 인적 역량, R&D 및 사업화 역량 그리고 혁신 환경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불가리아 산학연 협력 정책의 비전, ②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③ 4대 전략과 12개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주제 3에서는 불가리아 창업환경에 대한 여건 분석과 경쟁력 수준 진단,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창업지원 정책 및 사업지원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불가리아 산업단지 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정 모델 제시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3대 전략과제와 14개 추진과제, ② 제도·공간 측면에서의 우선 실행계획, ③ 정부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설계 그 너머: 소피아-보주리스테 산업단지 시범사업

2021/22년 불가리아 KSP 사업은 2022년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불가리아와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최종보고회를 기획할 시, 정책제언의 일방적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과제별 정책제안을 불가리아의 주력 산업단지 중 하나인 소피아-보주리스테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함께 제시하였다.

포커스

구체적으로는 소피아-보주리스테 산업단지가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주무기관인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인 정책역량과 디지털혁신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학연 아카데미와 종합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주기업 간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업토달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는 불가리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021/22년 불가리아 KSP 중간보고회 】

더 나아가 입지적 이점과 입주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1) 제조업 중심 육성, 2) EU 디지털허브의 정책목표와 연계, 그리고 3) 주제 1에서 제시한 디지털 혁신산업단지 모델 적용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전략적 전환을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자금 및 전문인력 조달과 같은 추가과제도 언급함으로써 정책제언 이행의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2021/22년 불가리아 KSP 중간보고회 】

본 사업이 불가리아 산업단지들의 디지털혁신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소피아-보주리스테 산업단지의 시범사업화를 위한 KSP 후속협력으로, 더 나아가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파생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배경 및 특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팀장 김하아람
kharam@kdi.re.kr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는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국가 간 실질적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시작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성과를 심화·확산하는 한편, 일반적인 정책·기술자문을 넘어 재원 조달, 민간기업 투자 및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를 목표로 한다. 또한 각 협력국별 최소 3년간의 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혁신 산업단지 등과 같이 혁신성장각종 인프라 구축이 유망한 분야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당시 EIPP 첫 협력국으로는 경제협력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가 선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태양광, 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미얀마는 '도시 인프라 및 투자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케냐가 신규 협력국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정책·기술 자문이 진행 중이다.

각 협력국별 사업 주제는 <표 1>과 같다.

그동안 국내 개발협력 분야에는 다양한 개발컨설팅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최근 도입된 EIPP는 주요 개발컨설팅 사업, 특히 기존에 활발하게 추진되던 기획재정부의 KSP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 표 1 】 EIPP 사업 주제 목록(2022년 현재)

협력국	주제	
	2020/21년	2021/22년
우즈베키스탄	① 건설 및 농기계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② 첨단기술에 기반한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① 농기계 제조업 육성을 위한 R&D 센터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 ② 타슈켄트주(안그렌시) 스마트시티 상수도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협력국	주제	
	2020/21년	2021/22년
우즈 베키스탄	③ 국가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 ④ 스마트물류 마스터플랜 수립 ⑥ 태양에너지 보급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③ 타슈켄트주(안그렌시)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④ 태양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전력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방안 수립 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PPP 방식 SPC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인도 네시아	①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② 수도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 개발 전략 수립 ③ 신수도 개발 자금조달 방안 ④ 신수도 에너지 전환 마스터플랜 및 에코스마트 시티를 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① 신수도 개발계획 2차-토지 확보, 활용 및 전담추진조직(PMO) 운영 ②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이전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③ 신수도 에너지전환계획 2차-가스활용 최적화 로드맵 ④ 신수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 계획 수립 ⑤ 신수도 교통체계 및 전기차 대중교통 시범사업 계획수립 ⑥ 발릭파판·사마린다 폐기물 관리 및 상수도 사업 ⑦ 신수도 지속가능한 식량 농업 계획
케냐		①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② 콘자 스마트시티 통합관계 센터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콘자 스마트시티 교통망 구축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출처: 저자 작성

첫째, EIIPP는 공급자 중심적인 개발컨설팅 사업이다. EIIPP는 기존 사업 경험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혁신 산업단지와 같이 혁신성과 관련된 주제를 핵심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후속 인프라 구축이 유망한 협력국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KSP가 협력국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접수받은 후, 타당성 검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했던 방식¹⁾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때 효과적인 협력국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사업 총괄기관들의 역량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 표 2 】 KSP-EIPP 사업 발굴 및 선정 체계

KSP 현행	EIIPP 계획
- 협력국 사업 수요 제출 및 검토 - 사전타당성 조사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검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승인 - 협력국 사전협의	- 협력국 발굴(EIIPP 핵심 협력 분야 중심) - 협력국 사전협의 - 사전타당성 조사 - 협력국 사업 수요 제출 -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 검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승인

출처: 저자 작성

둘째, EIIPP는 종합 개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과거 세계은행은 개발컨설팅 사업을 자문 서비스와 프로젝트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표 3) 참조). 자문 서비스가 협력국의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활동이라면, 프로젝트 서비스는 사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컨설팅 활동을 포함한다. 기존 KSP가 자문 서비스 중심의 개발컨설팅 프로그램이었다면, EIIPP는 자문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각종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은 프로젝트 서비스 유형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EIIPP는 1차년도 정책자문 제공, 2차년도 마스터플랜 수립, 3차년도 타당성 조사 실시 등을 통해 매년

1 최근에는 KSP도 사업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사업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협력국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선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을 심화·확대하며 실제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표 3 】 개발컨설팅 서비스 유형

자문 서비스	프로젝트 서비스	
	사전준비 서비스	실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전략 수립 - 규제 및 제도개혁 - 역량강화 - 관리 및 리더십 -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조사 - 마스터플랜 수립 - 타당성 조사 - 설계조사 - 전문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및 조달 지원 - 공사감독 - 프로젝트 관리 - 통합 서비스 - 교육훈련

출처: World Bank, 2006. Consulting Services Manual 2006

셋째, EIPP는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원조 분야에서 국익추구의 경향이 뚜렷해져 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개발컨설팅을 통해 협력국 인프라 투자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EIPP는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협력국 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선정 시 협력국의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사업 추진 중 EDCF 수요 발굴 및 협의, 투자·진출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총괄기관은 운영지침상 '후속사업 연계' 활동 중 하나로 기업 수출·투자 개선 계획 수립 및 중장기 성과 모니터링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인도네시아 EIPP 최종보고회 】



【 헝가리 EIPP MOU 체결식 】

이제 곧 3년차 사업에 착수하는 EIPP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동 사업은 과거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제도 발전 사례를 전수하기보다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고민하는 혁신성장 분야를 다루기에 끊임없는 기초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사업이 정책·기술 자문 활동에만 한정되어 있기에, 실제 후속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EIPP가 여러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국내 개발 협력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한편 2022년 하반기부터 헝가리가 비 ODA 국가로는 처음으로 EIPP 사업에 참여한다. 이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주제로 전기차·배터리 숙련인력 양성, 스마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한 친환경·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많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헝가리 EIPP는 협력국의 정책 및 제도적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장 홍성창
hongsc2@kdi.re.kr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1

더보기 ▶

연결성(connectivity)

'연결성'은 교통, 통신, 에너지 인프라를 기본으로 이동수단, 통신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이들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는 사회적 체계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연결성을 구성하는 시스템(교통, 전력, 통신서비스 등)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기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규범과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부,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가능하다. 구성 시스템과 활용 주체들은 상호작용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하며, 결국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은 서로 연결되게 된다.

한편 연결성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제 활동과 거버넌스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 국가의 우수한 연결성은 다른 국가의 후생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의 연결성 향상은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서 작용한다. '연결성을 위한 개발협력'은 연결성과 관련된 파트너(정부, 기관, 기업 등)들이 관련 체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과 재원을 서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1』 과제를 통해 '연결성과 개발협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편찬하였다. 특히 경제 인프라의 핵심인 디지털 통신, 에너지, 교통 부문과 이를 위한 개발재원을 살펴보았다¹⁾.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을 시작으로 각 부문별로 정책과 산업구조의 구성, 개발도상국의 현황과 도전요인, 국제사회의 분야별 사례 분석, 한국의 분야별 정책경험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교훈, 그리고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인 유무선 브로드밴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개도국은 인터넷 사용자 비중이 낮고, 도시와 농촌 간 인터넷 접근성 격차도 큰 편이다. 국경 간 트래픽을 연결하는 해저, 지상케이블, 국가중추망(백본), 이를 지역 상호접속지점을 연결하는 집선망, 상호 접속지점과 가입자를 연결하는 라스트마일 등 인프라 전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 분야별 대표저자는 각각 고상원(한국정보통신연구원), 류지철(미래에너지전략연구협동조합), 손의영(한국개발연구원), 김영기(현대엔지니어링). 전체 저자는 본 보고서를 참조 바람.



다자개발은행의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사업을 보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배양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세계은행의 DE4A(Digital Economy for Africa)사업은 디지털 인프라, 공공플랫폼, 금융서비스, 기업, 스킬 분야의 5대 영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디지털 분야 국제사업은 브로드밴드 등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통합데이터센터, 통관, 조달, 통계 등 전자정부시스템, 정보접근센터, ICT 교육인프라, 정보보안 인프라, 병원정보시스템 설립지원 등 네트워크와 연결된 물리적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의 확대, 디지털 협력의 주류화와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협력국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부처별 대표 사업 및 협력국 맞춤형 사업 발굴, 디지털 사업을 위한 지식, 기술, 자본, 금융이 결합된 패키지형 사업 기획과 추진 등이 필요하다.

에너지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접근성, 이용의 비효율성, 인프라 구축과 자원조달, 지나친 정부 간섭, 기술개발 및 정책 역량의 한계 등을 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도 발전초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시장 기제에 기초한 산업구조 조성, 개방화와 투명성 확립 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왔다.

한편 최근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등으로 에너지 분야 의제도 변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에너지 전환 정책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반영한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1)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자원 시스템 계획 수립,

2)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조사·평가 기법 공유와 협력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극대화 방안 모색, 3)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단지(Energy farm)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 계획 수립, 4)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등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정책 관점에서는 에너지 안보 역량 제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개선, 에너지 부문 시장 메커니즘 확립, 미래 에너지기술 개발, 에너지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의 의제에 관한 지식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교통

교통정책과 산업은 경제정책의 영향,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교통서비스의 공급주체, 규제, 구조개혁, 민영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도국은 자원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만성적 교통시설 부족과 낮은 서비스 문제를 겪고 있다. 공적원조와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부족한 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나, 높은 리스크와 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교통 분야 개발협력은 시설유형별로 도로 부문에서 점차 도시철도, 공항, 대중교통,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업 유형별로는 종합교통계획(Master Plan) 수립, 타당성조사(FS) 등 기술협력(TC), 교통시설물 건설, 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사업 발굴단계에서 여러 기관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조달하나, 기관 간 연계, 사전조사와 본 사업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교통 개발협력사업은 교통시설사업과 ICT 기반의 ITS와 BRT(Bus Rapid Transit)를 지원하고, 정부-민간 PPP 사업을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투자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 협력국 재정 여건을 고려한 PPP, 사업효과성이 높은 ICT 기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수단 서비스 운영 개선사업은 개도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설득하여 정책이행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발금융

개발금융의 목적은 대상 사업의 개발 효과(impact) 달성과 함께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프로젝트 위험 완화와 적정 수익 도달, 민간자본 유인 등 촉매역할, 재원의 부가성(financial additionality) 확보 등에 있다. 개발원조는 재원이 한정되어 수원국 개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국가채무 측면에서도 차입 여력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이 확대되면서 사업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와 대주단(lenders)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수단으로서 전통적 대출과 보증 이외에 지분투자, 준자본, 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PPP 프로젝트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비소구 금융조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방식을 통해 금융을 조달한다. PF 방식의 금융조달 기법은 복잡한 구조 및 절차, 높은 부대비용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 대비 고유의 장점으로 투자개발형 PPP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개발재원이 부족한 국제개발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적 공여 기관 간 조화와 국내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금융의 실무적 활용을 위해 '사업 발굴 단계에서 사업방식과 금융조달의 연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내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PPP 사업 지원 확대,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사업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마치며

최근 전세계적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 감염병 감시와 억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확대,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영, 국제사회 갈등 억제와 취약국 지원 등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국제사회 참여와 개발협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연결성이 개선되면 이를 통한 교역과 소통이 증대되어 국제사회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무역 강국이자 모범적 경제회복 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연결성 의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할 시점이다. ▣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팀장 이태연

tylee@kdi.re.kr



【 YKSP 6기 오리엔테이션 】

한국은 공여국의 역사가 짧으나 ODA 예산의 경우 내년에 4조 5천억원으로 확대되어 세계 10위권 규모의 ODA 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이러한 팽창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또한 다양한 주체가 여러 형태의 사업을 일궈내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력 양성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근무하는 청년층들의 이직이 잦다고 한다. 이직의 요인은 사업 관리가 분야

전문가에 비해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업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최창용 외, 2022). 하지만, 개별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관리 없이는 그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 관리란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주체를 한 팀으로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발협력 생태계의 핵심 인력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YKSP는 생생한 사업 관리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하다.

YKSP는 Young KSPians의 약어로, 2012년부터 시작된 KSP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YKSP 1기는 11개국 15명, 2기는 14개국 28명, 3기는 14개국 28명, 4기는 16개국 32명, 5기는 16개국 32명이 활동을 완료하여 총 135명의 YKSP를 양성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다시 재개된 YKSP 6기 사업은 지난 7월 가나, 베트남, 슬로바키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서 각 2명씩을 선발, 총 10명을 모집하였다. YKSP 6기는 지난 7월 21일~22일, 양일 간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2022/23년 사업 착수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표 1〉 2022/23년도 YKSP 참여 사업

국가	2022/23년도 사업 주제
가나	아크라 중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지원
베트남	클러스터 기반 창업지원센터 개발 운영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슬로바키아	중소기업 산업 4.0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우루과이	순환 경제, 디지털 산업 및 녹색제품 활성화 정책 수립
우즈베키스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YKSP의 주요 과업은 각 국별 사업 전 과정에의 참여 및 지원, 지역연구 워크숍을 통한 학술 활동 수행과 KSP 홍보 등이 있다. YKSP가 다른 국제개발협력 인턴십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KSP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업의 일부 단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부터 최종보고회 과정까지 총 4개 단계*에 참여하고, 협력국 고위관계자가 배석하는 정책자문 결과 발표는 물론 실행을 위한 생생한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 이를 통해 YKSP들은 협력국의 정책 입안을 위한 아젠다 세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 전반뿐 아니라 양국 간 협력이 쌓여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 워크숍을 통해서 학술역량 강화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구 워크숍은 각 YKSP들이 자신이 맡은 국가, 혹은 지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연구를 완성하고 발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YKSP들은 국별 사업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해당 국가, 지역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학술적으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 외에도 YKSP들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국제개발 협력포럼,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기타 포럼이나 세미나 등의 참석을 통해 다양한 주제나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YKSP 6기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으로, YKSP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KSP 홍보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런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YKSP 6기부터는 국가별 KSP 활동 내용 기록, 수기 등을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KS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YKSP 6기의 활약상은 향후 KDI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KSP 사업 참여, 학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YKSP들도 개발협력사업의 실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YKSP 재개를 통해 각 사업담당자들에게는 개발협력의 길을 선택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기회가, KSP 사업에는 새로운 활력과 생기가 더해지길 기대해 본다. 7

* 연구 착수회의,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태희 전문위원, 몽골 재무부 장관 표창 수상



지난 8월 9일(화) 몽골 재무부에서 열린 ‘2021/22 몽골III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에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태희 전문위원이 몽골 재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2010년 몽골 재무부의 요청을 바탕으로 기획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을 시작으로 경제개발계획 수립, 증권 및 국채시장 선진화 방안 등 몽골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사업(KSP)이 10년 이상 수행되어왔다.

본 행사에서 몽금치멕 산자(MUNGUNCHIMEG Sanjaa) 몽골 재무부 차관은 그동안 사업책임자로서 몽골 KSP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몽골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이태희 전문위원에게 재무부 장관명의로 표창장과 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몽금치멕 산자 차관은 “다년간 몽골과 한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애써주신 이태희 전문위원을 비롯한 KSP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SP 정책제언이 실제 몽골의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행사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탄소중립과 그린 ODA

2022년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2022 2nd Global Forum on Climate Change Law and Institutions

Green ODA 현황과 이슈

Current Issues of Green ODA

Co-hosts | 한국법제연구원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KDI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 CSDLAP | 대한국제환경법학회 Organizer | Supporter | Deutsche Botschaft Seoul

12.35 / 35.00

※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포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국문\)](#)

[영상 더보기\(영문\)](#)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년 7월 28일(목) ‘Green ODA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하는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1년 10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는 목표를 약속한 바 있다.

변화하는 탄소중립 정책 여건에 맞는 Green ODA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정책이니셔티브, 세계자연연구소 금융센터, 독일 개발연구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금에 대한 이슈를 발제하였으며, CID 김정욱 소장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개발도상국의 환경 인프라 조성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

행사

2022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식공유



2022년 9월 8일 KDI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및 KOTRA와 공동으로 '2022 KSP 성과공유컨퍼런스'를 개최 하였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식공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위축, 정부의 재정여력 약화,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등 여러 동시 다발적 위기 속 난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식공유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KSP의 역할로 세 가지 키워드(Preparation, Participation,

Partnership)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분야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다년도 사업 및 중소득국 이상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 한국의 경험을 지식공유로 전달함으로써 협력국의 위기상황 대응 역량 확충에 기여해야함을 표명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경제적 번영의근간으로서 포용적 제도를 강조하며, 다양한 난제 속 경제 성장 확산에 지식 공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행사



올해의 KSP 대표성과로는 인도네시아와 에콰도르 KSP 사업이 선정되었다. 각 사업에 참여한 협력국 고위정책결정자는 국가 주요 전략에 기반한 KSP 추진 경과 및 성과, 정책반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소개 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기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지식공유 협력의 기회, 정부·민간·국제기구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미래대응 분야 지식공유'와 '경제협력 연계 지식공유'를 주제로 그린·스마트인프라 분야의 KSP 사업결과 및 기후대응 연계 개발협력 매커니즘을 논의하고, 경제협력 확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였다.

동 컨퍼런스는 KSP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식협력 브랜드로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KSP 협력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KSP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컨퍼런스로 평가된다. ▣

2022 글로벌 포럼

2022 KDI Global Forum on Development Cooperation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KDI CID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등 각국과 경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설계 및 집행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각 지역과 분야별 정책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DI CID는 팬데믹 상황에서 변화한 대내외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협력국의 경제 사회 복원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의 연구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Digital Policies and Glob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년도 『KDI 글로벌 포럼(KDI Global Forum on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 사례 공유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 하고자 한다. ▾

일자: 2022년 10월 21일(금) **시간:** 9:30-12:00

장소: 엘타워, 서울 | 하이브리드 컨퍼런스(생중계 스트리밍)

주최: 한국개발연구원

프로그램

09:30 - 10:00	개회식, 기조연설
10:00 - 10:40	특별세션: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
10:40 - 11:10	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
11:10 - 12:00	종합토론: 협력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2022 KDI 글로벌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하이브리드 행사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께서는 10월 12일(수) 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하러가기 >>](#)